

환경친화도시 조성 속도

익산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 환경분야 특사경 설치
법규 위반 수사 중… 시민안전 위협 엄정 대응

익산시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지난 3월 검찰 지명으로 모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지역에서 우범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환경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팀은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그만큼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익산시는 다양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익산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뉜다.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별 환경위

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

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보고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현을 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밥쌀용 최고 브랜드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여산 쌀 작목반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심리행복(전북10호) 재배 교육을 23일 실시했다.

밥쌀용 최고브랜드 ‘심리향벼’ 아세요?

익산시, 여산 쌀 작목반 40여 농가 대상 재배 교육

다. 또한, 벼에 큰 피해를 주는 훨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한 특성이 있다.

현재 익산관내 벼 재배품종의 약 66%를 차지하는 신동진벼는 전국 최고품질 쌀 브랜드에 여려번 선정된 품종으로 전국 5위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익산 쌀의 위상을 높인 농가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신동진벼는 농식품부 공공비축미곡 배정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시 디수확(단수 570 kg이상/10a) 품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접전적으로 매입제한 품종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익산의 새로운 벼 품종 재배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쌀 생산 과정에 따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올해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신동진벼를 대체하고 신품종 보급·확산을 위해 심리향벼 재배로 익산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쌀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권하 원광대 병원장,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윤 병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치료에 앞장 서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원광인!’이라는 희망의 응원 문구와 영상 메세지를 전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해외입국자 관리 총력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충족한 방역체계 구축에 몰입했다.

시는 우선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코로나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해제된 해외입국자들은 격리 13일째 반드시 한 번 더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접촉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22 명이며 이들은 다음달 6일까지 순차적으로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본격

군산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종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실의 부서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조 강화에 나섰다.

특히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당선인(군산)이 주요 공약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공조가 더해져 군산시의 공공기관 유치대응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김재훈 기자

군산 콘텐츠 팩토리 본격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 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군산 콘텐츠 팩토리’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옛 수협창고(금암동 소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창업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 한 군산 콘텐츠 팩토리는 콘텐츠 창작·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지원 사업을 통한 초기 기업 활동을 지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가 환경사범 신고 보상체계 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시민 참여 활성화

익산시가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체계적인 생활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이条例’)가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

령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정지 등 행위 제한 명령은 10만원,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회비에 나아온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익산시는 시민 참여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포상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인 포상금 지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 개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CCTV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취약지역 청소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중대한 환경 오염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체계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오염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68건을 적발했으며 총 1천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